

민족통일 사상으로서의 초한민족(Korean Superethnos)

유가이 게라심 안드레예비치

(러시아 자연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학술연구센터 소장)

◁ 목 차 ▷

- I. 통일의 철학적·학술적 토대
- II. 초민족과 민족의식의 교착상태 및 극단성의 극복
- III. 각 지역(Subethnos)의 정치, 경제 발전과정 및 인구의 발전과정과 초민족 모델

본 논문에서는 별로 연구되지 않은 합일철학과 한반도 통일의 합일모델,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학술적·문화학적 토대가 고찰될 것이다. 민족통일 사상으로서의 초한민족 문제는 지면상으로는 처음으로 제기된다. 이때 초민족이라는 개념은 민족보다 발전된 단계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더 정확히 말해 종족자체의 사회화 단계 또는 민족개념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화 수준이다.

I. 통일의 철학적·학술적 토대

합일사상이 통일의 철학적, 학술적 토대를 이룬다. '합일'이란 개념은 라틴어 'Convegere'에서 유래하며 순수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까워진다, 근접하다, 또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 철학에서 합일은 상반된 유파간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일치점을 찾는 것을 뜻한다. 유물론과 관

념론의 대립,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서로 다른 사회체제간, 사회 세력간, 민족간, 서로 다른 신조간의 갈등이 20세기의 주된 경향이었다. 21세기의 문턱에서 철학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는 화합과 의견의 일치가 인정되었다.

합일은 사회, 경제, 정치, 종교 등과 같은 현대생활의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세계화, 국제화와 관련된 중요한 특성이다. 특히 그 무엇보다 철학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원칙적인 차이를 언급할 수 있다. 예전, 즉 불합일철학에서는 철학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요소가 특징적이었다. 그 첫 번째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과 대결이요, 두 번째 요소는 물질과 의식 중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발생학적 원칙이었다. 물질과 의식의 상호관계에서 둘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 또는 종속적인가를 선택,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합일철학에서는 첫째로 유물론과 관념론간,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 주체와 객체간의 원칙적 차별이 없다. 둘째로 철학의 기본문제는 결정론의 원칙 - 물질과 의식, 또는 물질과 영혼의 상호관계 - 을 토대로 조화의 원칙 하에서 해결된다. 따라서 조화의 원칙은 철학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합일 철학의 세 번째 주요 요소가 된다. 물질과 영혼의 선후문제를 벗어나, 즉 발생학적 요소에서 벗어나 물질과 영혼의 합일이 동등하게 인정된다.

합일철학은 인식론 내에서만 존재와 의식의 대립을 인정한다. 인식론을 벗어나서는, 다시 말해 존재론에서는 그 두 요소간의 대립은 상대적이며 의미를 상실한다. 그 반대로 존재론에서는 통일의 원칙, 물질과 영혼, 존재와 의식의 동등원칙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 두 요소의 합일점, 또는 일치가 합일철학의 특징이다.

그 철학의 대상 역시 합일철학의 주요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은 유물론과 관념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과 같은 상반된 유평과 경향의 합성으로, 또 그 상호관계의 동등한 조화로 규정할 수 있다. 물질과 영혼의 상호관계에서 어떤 것이 선행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물질과 영혼이 동등하게 이해되는 로고스가 합일철학의 주요 개념이다. 진리의 규정 역시 로고스의 이해에 달려 있다. 즉 진리는 로고스에 있고 로고스 내

에 표현되어 있다. 물질과 영혼의 조화 파괴는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로고스를 유물론적으로만 또는 관념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철학적인 개념의 로고스를 해석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지도를 해석하는 데서 유물론 또는 관념론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로고스의 방법론적 의미는 전체를 이루는 부분간의 상호 동등성 원칙에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이 말은 분단된 남북 양측의 진정한 통일은 조화롭고 동등한 원리 하에서 가능함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합일모델이 남·북 어느 한 쪽의 특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특권을 가질 경우 통일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다시 말해 동등한 조화가 아닌 일방성만이 존재하게 된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합일철학의 방법론적 도움으로 현재 남북한이 처한 심각한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발견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통일사업에서 이 역사와 문화는 크게 소용되지 않고 배제돼 있다. 계속되는 비극과 민족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오랜 시련을 겪은 한민족국가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쓰여질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역사와 문화의 합일, 또는 역사의 문화학적 문제의 합일을 논의한 주제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역사의 의미라는 개념과 연관된 가치론적 주제 역시 또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K. 야스퍼스, L. N. 구밀료프 등과 같은 세계의 석학들에 따르면 역사의 의미는 역사의 통일성, 민족국가의 통일성 속에 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분단이라는 조건하에서 한민족과 한국은 역사의 의미를 상실했고 인간실존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문제 또한 방대한 철학적 사유가 요구되는 주제이다. 이 주제는 광범위한 철학적 사색이며 그것은 특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통일철학과 함께 그 학술적 토대 역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원인에 따라서 인종지학적 문제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의 범주가 영토, 언어, 문화, 심리, 경제의 단

일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민족은 단일민족의 대표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민족은 언어 이외의 모든 민족적 징후에 따른 민족적 동질성을 상실했다. 한민족은 민족에서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종족이 된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통일 문제는 민족문제라기보다는 인종, 종족문제로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거는 한반도 자체가 단일국가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논거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인종지학적 문제임을 의미한다.

학문으로서의 인종지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접속점에 위치하면서 양분야의 경계와 합일의 학문이 되고 있다. 인종지학은 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지질학, 심리학의 수렴의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다. 한민족의 통일문제의 철학적, 학술적 토대의 일치 및 그 합일의 본질은 바로 이제 언급한 것에 내포돼 있다.

인종지학은 바로 철학 - 유물론과 관념론 - 자체에서도 합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러시아의 뛰어난 학자 구밀료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인종지학적인 차이는 실재하며 사람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지각된다. 단순한 인종지학상의 결합 때에는 현상에 대한 의의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민족간 관계가 강화되고 그에 대한 자료가 짐적되어 감에 따라 의의부여에 대한 필요가 커졌고 지식의 체계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변적인 관념철학과 그 대안으로 생겨난 통속화한 유물론의 관점을 견지했던 19세기 학문은 제기된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주요한 방해물은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즉 살아 있는 자연이나 죽은 자연에서 철저히 분리시킨 데 있었다. 의학만이 예외였는데 그것은 철학자들 자신이 병에서 완치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¹⁾

19세기에 자연과학은 무엇보다도 유물론적 토대 위에서 발전되었고 인

1) 에프노스테라 L. N. 구밀료프, 「인간사와 자연사」(모스크바, 1993), p. 54.

문과학은 관념론의 토대 위에서 발전되었다. 이것은 인종지학에도 해당된다. 인종지학에서의 유물론적 노선과 관념론적 노선의 투쟁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구밀료프가 인종학에서 두 철학노선의 융합을 꾀했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철학과 과학에서처럼 인종학에서도 합일노선이 자리할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바로 이것이 현재 형성된 한반도 및 한민족 통일문제의 다분히 본질적인 철학적·과학적 토대이다. 주체사상을 비롯한 모든 다른 철학들이 이 합일철학에 양보하고 있는데 극단이 없는 중도철학이 가장 전도가 밝기 때문이다. 주체철학은 합일의 철학이 아니다. 그 반대로 주체철학은 극단과 절대자의 철학이다. 전체를 이루는 쌍방을 양극화하는 것은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법이다.

II. 초민족과 민족의식의 교착상태 및 극단성의 극복

그런데 북한에 보급된 주체철학은 무(無)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주체철학은 한민족의 자족심리상태의 다른 표현인 바 그 토대는 한민족에게 내재돼 있었다. 그것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한민족이 갈구했던 자유와 독립의 구현이었다. 수십년 간 식민지 국민으로 하등인간이라는 상처와 모욕을 주입 받은 이후에 민족의 자긍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던 소망이 그런 식으로 발현되었다. 이런 점에서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그 극단성과 다른 민족을 경원시하는 것으로 발현될 때에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최고라서 부러워할 만한 이가 없다”는 심리는 민족 자존과 자긍심의 절대화에서 생겨난 민족적 넌센스이다. 보스주의에까지 이른 자존의 절대자 이외에, 기강과 윗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유교사상의 절대자, 공산주의적 집단주의의 절대자가 그들에게 있다.

세 가지 절대자가 한민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인 교착상태를 만들어 낸다. 만약 진실을 절대화하여 극단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혁명적인 비타협과 초지일관성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 어떤 진실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민족적 배타성, 자기격리의 주체철학은 한민족을

소민족 그룹으로 전락시킴으로써 한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북한민족은 육체적으로나 남한민족과의 군사·정치 대결로나 문자 그대로 고립과 자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민족 자멸은 군사충돌, 정치적 대결, 테러나 다른 폭력적인 행위에서뿐만 아니라 기아로 인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죽음으로도 이루어진다. 남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아사자 수는 3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반도의 북쪽에 사회주의 사상이 그 절대화의 방법으로 극단에 치우침에 따라 그곳에 형성된 체제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으며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지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되었다. 그 체제는 공산주의라고도 민족주의라고도 명명될 수 없다. 한반도 남쪽의 동포들에게 적의를 보이므로 그것은 결코 민족주의 체제가 아니다. 북한체제는 바이킹화된 국가로 명명될 수 있다.

한반도 남쪽에는 다른 절대자가 존재한다. 경제에서 절대자는 국가경제를 통제로 거머쥔 소수 재벌회사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예속되어 있다. 정치에서 절대자는 서구모형에 따른 국가의 세계화 및 근대화이다. 문명화된 코스모폴리터니즘은 민족문화의 우위에서 민족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적잖이 가지고 있다.

형성돼 있는 민족적 절대자, 년센스에까지 이른 절대자와 극단의 절대자에서 벗어날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대체 극단적인 민족 자의식의 산물로 인해 교착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현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가 있긴 있단 말인가? 출구는 있다. 그것은 중용의 길이다. 그것은 극단의 모서리를 깎아 세우고 융화의 방법으로, 즉 이해관계와 견해 등등으로 대립하는 이들을 가깝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일철학의 길이다.²⁾ 민족고립의 주체철학이 아니라 단일한 초민족으로 한민족을 규합, 통일시키는 합일철학이 대안이다. 초민족으로서의 한민족 사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통일사상의 핵심이자 본질을 이룬다. 민족사상이 통일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 초민족 사상에 국지성, 치외법권, 가치론, 문화론, 소외와 이데올로기 극복이 내포되어야 한다.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카이 게라심 안드레예비치, 「러시아의 중도 - 융합된 사회」 (모스크바, 1998) 참조.

초민족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학설의 주창자는 러시아의 석학 구밀료프인데 그는 한민족도 초민족의 범주에 포함시켰다.³⁾ 초민족의 개념에서 구밀료프는 매우 풍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초민족은 이리저리한 민족이 전 세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사회심리학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리저리한 사람들의 통일된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구밀료프의 이 두 요소에 세 번째 요소를 첨부한다면 그것은 민족이라는 요소보다 사람들의 사회적 양식에 보다 일치되는 초국가적인 수준이다. 만약 사회적인 것이 민족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입각한다면 한민족의 초민족화는 말할 것도 없이 보다 진전된 상태이다. 이것은 한민족 문명화 발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민족통일사상으로서의 초민족은 한반도의 두 부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에게도 해당된다. 한민족은 순수민족의 수준을 이미 역사적으로 지나왔다. 민족 수준의 단계는 이미 때가 지났으며, 현실에 보다 적합한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초민족으로서의 한민족 수준이 바로 우리에게 적합한 접근 방법이다.

민족통일과 한민족 규합에 대한 초민족 수준은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 상황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꽤 매력적이다. 이때 전 세계의 한민족은 인종지학적으로나 초인종지학적으로 단일하며, 그리고 민족적인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사회 문화 및 문명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인 견지에서도 단일하다는 사실이 통일의 기본 테제가 될 수 있다.

3) 초민족은 모든 지형적인 장애를 가로질러 지표면의 수천km에 걸친 동일선상에, 동시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원후 진동 1: 고트족-슬라브족-다르족(루마니아의 고대주민)-그리스도 교인들-유대인-아비시니아인(아크수미트인) 또는 진동 6: 아랍인(회교도)-코사트리아(역주: 인도의 무사계급)-노트인(남티벳)-타브가치-중세 중국인들-한국인(신라)-일본인(야마토)이 이를 말해준다. 에프노스테라 L.N. 구밀료프, 『인간사와 자연사』, p. 511. 만약 초민족의 기본 특성이 지정학적인 분포도에 있다면 한민족은 지금도 초민족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치상 한민족은 10위안에 들기 때문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국외거주 러시아인이 2,500만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엔 2,000만명의 중국, 그리고 한민족은 550만명이 해외에 거주한다.

순수민족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바로 그러한 접근방법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초민족 정신이었던 요소들이 이제까지 한민족 정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미 오래 전에 세계문명발전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한민족의 통일은 한반도 내에서나 한반도 밖에서 무엇보다 비폭력을 토대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초민족적·초지역적 접근방법은 지금처럼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고찰 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양쪽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거주하는 전 세계 다른 지역의 사회·정치구조 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제들과 영토문제까지 내포, 고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통일의 가치 및 의미적 측면과 연관된 가치론 문제가 야기된다. 무엇을 위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 세계 한민족이 단결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들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고 그 사회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또다시 통합되어야 한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민족과 한민족의 문화 및 초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이것 없이 한민족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종족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런 종족들은 쉽사리 소멸되거나 동화돼 버릴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민족에 의한 종족 부정, 종족에 의한 민족, 아니 보다 높은 수준의 초민족 부정이라는 이중 부정의 토대 위에서 한 종족에서 민족으로, 더 나아가 초민족으로 성장하는 역사적 발전단계가 아니라, 민족이 붕괴되고 소멸되는 지름길이다. 초민족이라는 것은 전 세계 한민족의 독특한 문명자산이며 이 초민족 의식을 통해 민족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초한민족 문제에 대한 학문적 의미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중요한 주제를 토론하고 비교인류학, 사회학, 문화학, 정치학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구성체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전체속의 부분 부분들로 비교 연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초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의 통일성 문제를 공식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모든 것이 비교 속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초한민족 연구는 다른 초민족들과의 비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학과 가치론 문제 또한 시급하다. 가치

론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한민족의 단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면 문화학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단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준다.

문화학과 함께 소외와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열을 극복하는 형식의 다른 통일방법도 존재한다. 통일사업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외의 철학적 카테고리부터 논의해 보자. 한민족에 대한 한민족의 소외는 가장 커다란 민족적 비극이다. 왜 한민족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서로 싸우기까지 하는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무언가가 그 창조자에게 낯설게 되었을 때 소외는 자리잡는다. 소외는 무언가 자기 것에 대한 상실이다. 재산, 권력, 민족성, 가족 등등이 바로 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해 소외란 자기 것이 낯설게 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을 서로 소외시킨 인자는 적지 않다. 그 중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과밀을 꼽을 수 있다. 한반도라는 비교적 좁은 영토에서 과밀한 주민들은 안락하게 생존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족내 경제권에 그 원인이 있는데 가족성원이 많은 대가족 속에서 재산 상속권은 장자에게만 있었다. 이것은 장자 이외의 가족 성원들에게 심리적 불만과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가족내 소외의 원인이 된다. 보건대 바로 이것이 한민족의 심리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형성을 촉진시킨 것 같다.

불평등과 부정의라는 조건하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란 말인가” 하는 원칙에 따른 사회·심리적 자기긍정과 자기완성의 형태로 항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불행에도 좋은 점 한 가지는 있다. 이주의 형태로 나타난 소외는 한민족의 초민족화라는 긍정적인 현상을 만들어 냈다. 동시에 이 비극은 행복하게 끝을 맺고 있는데 수많은 한민족 이민들은 결국에는 한국문화를 초민족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긍정적인 과정이다. 이제는 이 민족의 풍요한 자산과 초민족적인 기적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만 남아 있다. 민족 소외의 극복은 우리 민족이 초민족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철학·이론적 성격은 물론 실제적 성격을 띤 수많은 문제들도 있다.

실질적인 문제 중에는 무엇보다 초한민족 영역의 국가정책을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문자 그대로 사상권)가 있다. 만약 한반도 양 체제의 정권이 한민족은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 선택된 독특한 초민족 대표자들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구밀료프에 따르면 전 세계에 초민족은 모두 7~8개 있는데 그 중에 한민족이 포함돼 있다), 한민족의 역사적 운명은 한결 행복하고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한민족끼리 소외시키고 적대시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이 초민족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다수의 종족군으로 전락해 쉽게 날려가는 민들레처럼 역사의 바람에 의해 다른 민족에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냐는 딜레마 해결은 많은 부분 사고전환에 달려 있다.

한민족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햄릿의 이 존재론적인 문제는 양 체제의 권력충돌만 아니라 인텔리겐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인텔리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분산된 한민족을 비교, 연구하고 총체적인 초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데 있다. 이때 진실의 철학적 카테고리인 물질과 정신의 통합이라는 로고스가 전면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Ⅲ. 각 지역(Subethos)의 정치, 경제 발전과정 및 인구의 발전과정과 초민족 모델

위에 열거한 사항들 중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경제문제는 세계적인 측면에서나 지역적인 측면에서나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세계적 국면에서의 본질은 초한민족이 경제발전 규모상 강력한 초민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한국은 비록 경제대국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나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못했다. 이 점은 일본과의 경쟁심에서 특히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남한사람들이 일본을 따라 잡아 앞지르려 하는 열의에는 감탄이 절로 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인 측면에서나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경쟁의 실제적인 근거가 무엇

인가 하는 의문이 인다.

나는 한국인들이 단 한 가지 조건하에서만, 즉 '초일본민족에게 있는 장점을 한국인들이 획득했을 때에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장점이란 단결심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한국인의 행동에는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 일본인들이 단결했을 때 강하고 개개인일 때 약한 반면 한국인들은 개개인일 때 강하고 함께 했을 때는 약하다. 두 민족은 초민족의 특성 자체인 행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양극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두 초민족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측면에서 융합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유감이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인의 개인주의를 부러워하는 반면 일본인들의 단결정신을 부러워하는 한국인이 있을까 싶다. 초민족으로 나아가려는 민족의 사회 발전속도는 구성원의 개인주의보다 단결정신에 훨씬 더 좌우된다.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척도인 화합과 조화 속에서 공존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초한민족의 행동 속에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공동체적인 것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모델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경제모델 속에서 초민족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 중의 문제이다. 초민족의 세계적 측면에서 한민족의 개인주의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닌다. 그 강점은 가령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인들은 개인의 우수한 자질 덕택에 전 세계 곳곳에 분포됨으로써 초민족화 정도를 현저하게 드높였다는 데 있다. 한국인들은 혼자서나 집단으로나 보다 적응력이 강하다.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별 피해 없이 세계 어떤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고 특별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비록 갈등이 빚어진다 해도 그 갈등은 보통 생활 및 민족 갈등, 또는 민족간 갈등을 넘지 않고 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한민족에게 있어 항의의 형태나 심각한 모순을 포함한 온갖 문제의 해결 방법은 대결이 아니라 이주였다.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자리잡고 살던 곳에서조차 비교적 쉽게 떠나간다. 이 점에서도 또 다시 초한민족의 장점과 약점이 나타난다. 초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

서 보았을 때 이 점은 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사람들의 이주는 민족의 힘을 응집시키기보다는 즉 엔트로피를 증대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엔트로피 과정은 들어킬 수 없는 에너지 분산과정이다. 구밀료프가 민족발생이 엔트로피 생성과정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⁴⁾

그 책에는 엔트로피의 반작용, 즉 민족 에너지의 분산에 관한 당면한 문제의 답이 쓰여 있다. 에너지의 응집과 축적 메카니즘은 어떠한가? 이 과정은 반엔트로피성으로 명명되거나 에너지 축적과 그 조직의 정보과정으로 명명된다. 정보는 에너지 조직의 척도다. 요컨대 매우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성립된다. 즉 에너지는 운동의 척도이고 정보는 에너지 조직의 척도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저에는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의 근간에는 정보가 있는데 개인과 사회, 집단이 그 정보의 보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정보조직의 집단적 사회형태가 명백하게 우위를 차지하는데 그것 없이는 경제, 문화, 언어 같은 사회 현상이나 그 어떤 사회 조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공동체 없이는 사회현상이 있을 수 없다. 매우 진부한 말 같지만 초한민족에게 정보, 통신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 경제, 문화 같은 사회적 속성들이 그리 발달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지역에 해당되는 말이다. 즉 해외교포들에 해당되는 발언이다.

중국인, 유태인, 일본인 같은 초민족 대표자들이 그들에게 우세한 단결 정신으로 특히 해외에 집단적인 생활기반을 형성하여 무엇보다 먼저 민족 경제와 민족자본 형성에 심혈을 기울인 반면, 즉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건 그 민족의 정상적인 생존을 위한 경제적 기본토대를 다지는 반면, 한민족의 개인주의는 그러한 활동에 방해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지적이 재미, 재일교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민족경제와 민족자산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재소, 재중교포들에게는 곧바로 해당된다.

여기에서 재소, 재중교포들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련과 중국의 사회체제, 즉 전체주의적인 공산체제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 반박할

4) L. N. 구밀료프, 에트노스페라, 「인간사와 자연사」, p. 534.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체제가 이미 와해된 지금 우리 교포들이 민족 공업과 농업, 은행 등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도대체 뭐가 방해가 된단 말인가? 나는 지금 그러한 나라에 교포들의 일정한 생활수준 보장이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범민족적 규모의 조직이 있는가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나는 1998년 8월 재정위기 이후 러시아의 유대인 동료학자들이 러시아의 주요한 유대은행들은 보존될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적잖이 놀랐다. 바로 여기에 민족단결의 힘이 있는 것이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교포들은 나약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재러 교포들은 러시아에 민족자산이 형성될 것이라는 꿈을 속으로나마 꿀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오거나 할까? 만약 그런 때가 도래한다면 러시아에서도 초한민족의 유지와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나를 편향적인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살펴 보라. 이미 옛 공화국들이 주권국이 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그리고 러시아연방 자체 내에서조차도 자기의 민족경제 형성에 동분서주하지 않는 자치공화국이 어디 하나나 있는지. 러시아연방의 민족자치공동체가 민족경제를 형성할 권리를 갖는데 민족자치공동체에 대한 권리가 없는 민족이라고 해서 민족경제를 형성할 권리가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며 특히 경제에서는 철저히 객체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나는 1937년 스탈린 추종자들이 고려인들을 강제이주시켰던 카자흐스탄의 시골마을에서 성장했다. 그 라이온(면에 해당)에는 10개 이상의 집단농장이 있었는데 그 중 세 개가 고려인들의 집단농장이었다. 이 세 개의 고려인 집단농장은 당시 소련 전역의 농촌지역과 비교했을 때 16명에 달하는 가장 많은 사회주의 노동영웅을 배출했다. 라이온 내의 절반 이상의 집단농장들이 국가계획을 완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개의 집단농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 및 당의 규율에 따라 전 라이온의 쌀 공급량을 생산해 내야만 했다. 그것은 선진집단농장들에 대한 가장 지독한 착취여서 그 성원들은 착취를 견디지 못해 또 다시 이주해야만 했다. 농민들의 거주제도가 폐지된 후 집단농장원들의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소비에트 시절의 집단주의에 대한 패러디였다. 집단주의라는 극단이 개인주의라는 극단을 생성시켰는데 우리 한민족에게 이미 그러한 성향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었다. 이 모든 현상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사람들의 이주가 민족적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초민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유사한 일이 중국 조선족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민족경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기민족 사업에 이익을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었다. 그래서 조선족 동포들은 해외에서 번 돈조차도 결국에는 중국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내주게 된다. 한 때 소련의 고려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노동의 결과물이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탈출구로 이주를 택하게 되자 그 결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크게 초과되어 수업진행이 어려웠던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미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동포들은 여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다 나은 운명을 찾아 정든 곳을 떠난다. 수많은 동포들이 남한 회사가 있는 곳에서 통역이나 보조자로 일자리를 구한다. 남한 사람들이 현지 동포들에게 언제나 예의바르게 대하는 건 아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다른 나라의 현지동포들 사이에서도 지적되곤 한다. 그것은 한민족의 개인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 아닐까?

해외의 유일한 한민족 자치구인 연변동포들의 대규모 이주는 초민족 전반에 있어 커다란 비극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초민족의 잠재적 에너지를 약화시켜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트로피 과정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유경제지역 같은 형태의 민족경제 발전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러시아, 중국, 한반도 접경지대에 있는 '두만강' 프로젝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연변의 연장선상이라 연변의 조선족들이 두만강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데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러 경제협력의 범주에서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민족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같은 다른 가능한 경제모델에도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이 때 국가의 개입이 있을 법한, 즉 초한민족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나라

들의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초한민족의 체제문제와 연관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남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러시아가 러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민족자본 발전에 어떤 국가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자유경제지역과 함께 다른 다양한 민족경제 발전 프로젝트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특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족자본 유지의 믿을 만한 보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민족은행 시스템 발전이 바로 이 같은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한 마디로 스탈린의 박해를 당했던 러시아 동포들이 세계 초한민족 성원으로 실질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민족경제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 하에서 민족문제는 자치구 획득과 정치적 자치권 요구에서 경제적 독립, 타민족과의 동등한 협력, 자치권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재러 교포들의 민족자치는 영토 요구 없이 문화·경제활동의 범주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을 획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세계과학의 성과물을, 특히 기초과학의 성과물을 토대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기술을 경제발전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최대 당면 과제이다. 그 본질은 선진과학의 성과물을 경제발전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번역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초일본민족이 과학·기술 분야의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데 선두를 달림으로써 이 부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훌륭하게 조직, 추구되었던 산업스파이 행위였다. 그것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명에 재빨리 특허권을 내고 생산을 서두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러시아에도 천만 - 일억 달러에 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진 거대 신 공업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공업단지가 아직 20개 이상을 넘진 못하지만 거기에 거는 희망은 상당하다. 그런 공업단지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지렛대로 간주되고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초한민족의 이익을 위해 그런 유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 그런 유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지는 게 세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호소인데 이 때 초한민족의 엄청난 잠재력에 주의를 기울이

기 바란다. 한인 학자 및 인텔리겐차의 수는 세계에서 수위를 차지한다. 초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을 위해 이 잠재력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한반도 통일과 전 세계 한인들을 초한민족으로 결코 규합할 수 없다. 한민족들에게 극도의 개인주의가 나타난 이 시점에서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민족의 개인주의는 북한체제와 분단정책, 남북간의 소외로 나타났고 그 결과 엔트로피 과정이 반엔트로피와 정보발전과정의 우위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민족 엔트로피의 우세 때문에 초한민족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 한반도 한 쪽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는 다른 한 쪽, 즉 남한의 강력한 에너지 상승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당면 과제들은 신생학문이 이룩한 성과물의 견지에서, 즉 자동조절과정이 그 연구대상이 되는 공동근(共同筋)학의 견지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에든 조건적으로 한계수준이라 명명할 수 있는 그 조직의 특수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조직이 이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면 그 조직에는 조직정비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만약 수준 이상이라면 조직파괴 과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계상황에서는 조직 정비와 조직파괴 과정이 평형을 이루어 조직은 안정을 획득한다.

한계상황의 중요한 특성은 그 한계수준이 조직에 대한 외부영향력의 크기에, 즉 그 조직의 개방성에 그대로 상응한다는 데 있다. 보다 개방되어 있을수록 한계수준은 높아지고 조직파괴과정은 축소되면서 보다 큰 가치를 이뤄낼 수 있다. 실생활에서 그것은 만약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관의 내부조직수준을 보다 상승시키고 싶다면 그 조직의 자기조절 및 정비과정을 촉진시키면서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로 기관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개방성을 축소, 즉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조직 내에서 파괴과정이 우위를 점해 그 기관은 와해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체제는 외부와의 정보교환이 완전히 박탈된 극도로 폐쇄된 사회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 곳에서는 생성과정보다 파괴과정이 우위에 있다. 그 사회의 체제 위기는 개방사회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 파괴·혼란의 엔트로피과정에 맞서는 것은 반엔트로피과

정, 조직정보 발달과정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정보를 보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현명한 경구에 따라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진정한 한민족 세계를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나라 문을 닫아 걸고 주변세계에 귀 막고 사는 자가 아니라 경제, 정치, 학문, 문화영역에서 나라 문을 활짝 열어 쫓히는 자일 거라고.”

북한의 폐쇄성은 내부에서 구멍을 내며 초한민족 형성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 분단상황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북한의 정보진공상태는 완전한 초민족의 잠재력을 수백배 감소시킨다. 폐쇄사회의 문명위기는 전체주의 체제에 의한 민족의 잠재력과 적극성을 완전히 억압하는 데에 표현돼 있다. 남한사람들의 적극성으로 미루어 보건대 북한사람에게도 선천적으로 그런 원기 왕성함이 내재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에너지가 민족의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에, 그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예속되어 있다. 북한의 전체주의는 정치지도부로 단장한 민족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발현이다.

전제정치체제와 보스주의로까지 치달은 한민족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통일된 국가와 민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요소는 진정한 통일, 단결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적 야망은 지도자의 깃발 아래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하에서만 충족될 것이다. 그 이외의 지도자란 있을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한민족의 가장 큰 비극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민족의 개인주의는 일본 집단주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치, 경제, 학문에서 명백히 패배한 셈이다. 하지만 초한민족이 운이 좋다고 할 만한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개인주의가 사회민주화의 믿음직한 토대가 된 것만 보더라도 개인주의가 집단주의에 언제나 패배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생각은 인구증가 과정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인구증가 과정에서 일본 집단주의는 ‘한 지붕 아래 3세대’라는 원칙으로 표현되는데 한민족의 개인주의는 “고려인 남자는 혼자서, 고려인 마누라 없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 그런데 고려인 여자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이야기 속에 표현돼 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농담이다. 그러나 농담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농담 속에는

간과할 수 없는 진실이 들어 있다. 일본에서 한민족의 개인주의에 대한 시기심을 감추지 않는 데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때 해외에서 일본인들은 절대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데 한민족은 개인적으로 생활한다는 사실이 증거로 제시된다. 만약 일본인중 누군가가 해외에서 자리를 잡아 부자가 된다면 보통 일본인은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일본인 심리 내에 조국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국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그것은 명확치 않다. 그런데 한민족에게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강하다.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노랫말에는 얼마나 애잔한 향수가 담겨 있는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 대개가 고향엘, 조국엘 갔다 왔거나 아니면 언젠가 갈 거리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보통 한민족은 해외에서 부자가 되면 대개가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잘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일본인에 비해 한민족이 또 하나 이기고 있는 것은 출생률과 사망률에서 한민족의 출생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한 가정에 2~2.5명의 자녀가 태어나 사회재생산의 평균치를 유지한다. 물론 한민족이 거주하는 각 지역의 평균치와는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은 출생률이 평균치를 약간 밑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고려인 동포 모두가 한민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88서울올림픽 이전에 눈에 띄었던 타민족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 당시 혼혈 고려인들 중 적잖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반강제로 그랬는지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러시아 문화에 명성을 떨친 유명인사들조차 그랬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공훈시인이자 인기 있는 음유시인 김 울리는 전에 어머니 성을 따서 성을 미하일로프라고 했다. 아버지는 김칠상 이라는 사람으로 1930년대에 총살당했다. 아들을 생각해서 아버지가 아들 성을 바꾸라고 권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김 울리가 살아남아 망가지지 않고 한 인간으로 성장해 음유시인으로 명성을 떨친 데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 신문에서 김 울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아나톨리 김에 관해 언급하면서 양 김씨가 러시아 문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글을 읽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타민족과의 결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다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들은 육체적인 혼합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양 문화의 합일과 대화의 증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전 세계가, 문화가 들어차 있는 것이다. 체조분야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넬리 김, 볼쇼이극장 솔리스트 류드밀라 남, 사후에 더욱 인기를 떨친 음유시인 빅포르 초이 등이 바로 그런 재능 있는 혼혈한인에 해당된다. 그들 모두가 민족 에너지의 증대를 증거했고 유라시아문화의 독특한 대안을 보여 주었다. 또한 동시에 일정한 지역에서, 즉 구소련과 현 독립국가연합지역에서 한민족 문화를 초민족의 범주로 끌어올린 증거물이기도 하다. 이것은 초민족이 종족의 사회화 산물이라는 사실의 증거물이다. 종족은 아직까진 자연현상이자 인류학의 한 현상이다. 민족에 의한 종족의 변증법적 부정, 초민족에 의한 민족의 변증법적 부정의 결과물로 생겨난 초민족은 문제가 전혀 다르다. 동시에 초민족은 광범위하게 공유화 된 특성을 지닌, 가장 높은, 민족발전 단계이다.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재러 동포들의 자기확신의 과정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배경 하에서 한국 성을 갖지 않은 혼혈후손들, 즉 아버지가 한민족이 아닌 혼혈아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엄 넬리 니콜라예브나가 교장으로 있는 리·한 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타민족간의 교류는 인종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 교유의 특성을 다소 상실케 하지만 초민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라시아문화 교류와 사회문화 발전을 가져오면서 그 민족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혈이 민족의 잠재력과 열정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한민족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 그 양은 새로운 질로, 즉 한민족의 개인주의가 집단주의로 변화되는 양질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결합이라는 민족심리의 대전환이 일어날까 하고 주시하는가? 초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그러한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초일본민족에게는 그러한 미래가 별로 없다. 그에 대한 논거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아 민족이 노쇠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어려운 전후시대에 일본에서 매년 300만명 가량의 어린이가 출생한 반면 현재에는 100만명을 약간 웃도는 출생률을 보인다. 젊은 일본 여자들은 출산을 거부한다. 그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여자 평균 결혼연령 27세)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출세를 위해 아이 낳기를 회피한다. 출산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게 과세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인구발전 과정에 위기감을 조장한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수가(2,500만여명)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15세 이하 연령층(약 1,9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민족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평균수명 연령은 남자 77세, 여자 84세이다. 일본은 평균수명 연령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표는 더 커질 것이다. 일본의 노령화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중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지난 30년 동안 7%에서 16%로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그같은 현상이 114년에 걸쳐 진행됐고 미국에서는 69년이 걸렸다. 인구학자들은 2025년 경에는 65세 이상이 일본인 4명당 1명에 해당하는 25%에 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한다. 이것은 현재 한 명의 연금생활자를 위해 6~7명이 노동하는 데 반해 얼마 안 있으면 2명의 노동가능인력이 연금생활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구 노령화의 급속한 과정은 심각한 사회·경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면서 '실버혁명'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먼저 노동 가능층의 축소와 함께 증가하는 연금생활자 수는 사회보장제도에 큰 짐이 된다. 일본 인구의 1/4이 6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현재의 17%에 반해(현재 이 액수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월급의 35%까지, 심지어 50%까지 연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노동인력이 그런 보험액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2배 이상 올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품가에 반영되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둘째, 연금생활자의 증가는 세금액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것은 또한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을 야기시킬 것이다. 셋째, 출

생활 저하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 지지만 일본인들은 노동인력 수입을 내켜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거대기업들은 더욱 앞다투어 다른 나라로 생산시설을 이전시킬 것이고 현재 그 기업의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일본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는 개인의 저축액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 즉,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저하될 것이다. 생산의 효과성에서 북미, 서유럽을 앞지른 일본은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훨씬 뒤쳐져 있다. 얼마전까지 이 부족한 점은 '3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유교전통에 의해 보완되었다.

가정에서의 특수한 역할이 어린 시절부터 강조되었던 맏아들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부모의 노년을 책임져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모지(쌀을 퍼담는 나무삽)를 넘겨준 순간부터 집안 살림은 다음 세대가 맡아 하게 되고 부모는 가정일에 충고만을 해 줄 뿐이었다.

1960~80년대에 80%의 일본가정이 '3대 한 지붕 밑'이라는 원칙에 따라 살았던 반면 요즘에는 30% 정도만이 그런 전통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 수에서 일본은 영국을 곧 앞지를 것이다. 텅 빈 요람의 '실버혁명'은 일본이 6,700만의 인구로 22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케 하는데 이는 21세기를 맞는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⁵⁾

백년 후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나 그 전망이 맞아떨어질지는 어느 정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삶은 보통 수정·보완되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일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다. 한 쪽으로 치우친 일본의 집단주의가 인구 증가에서 큰 해를 끼치는 것처럼 한민족의 치우친 개인주의 역시 초한민족 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산재(散在)라는 인종학 용어는 생물학 용어 포자, 포자식물에서 유래했는데 포자식물의 미세한 씨앗은 쉽게 흩어진다. 그런데 종족의 산재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종족의 분포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한민족의 현 상태를

5) 러시아의 유명한 일본 전문가 겸 언론인 V. 오프치니코프는 1999년 8월 21자 「로스스카야 가제타」지에서 “텅 빈 요람의 나라의 ‘실버 혁명’”이라는 글을 이렇게 맺고 있다.

매우 정확히 전달해 준다. 흔히들 말하기를 돌맹이를 던져 버려야 할 때가 있고 돌맹이를 모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하나 그 돌맹이를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영토에 근거를 두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유일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한 영토에 운집하지 않고 그 민족을 규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화가 있다.

백년전 영국학자 헨리 토마스 버클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민족의 부유함은 자연의 자비에 달려 있지 않고 개개인의 힘, 지적발전, 이성과 문화에 달려 있다. 전 세계의 한민족을 문화를 통해 단일한 초민족으로 규합하는 것이 민족의 보존 방법이며 한민족의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민족의 물질·정신적 풍요로움은 바로 이 잠재력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정신적 풍요로움은 또한 한민족이 자기 삶의 의미, 즉 개개인 민족 국가의 통일성을 인식함으로써 획득된다. 조각으로 절단된 유기체는 시체이다. 분열된 민족은 존중받을 가치를 상실한 민족이다.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종족으로서의 한민족은 바람에 쉽게 날려갈 수 있다. 한민족에게는 역사의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든지 아니면 단일한 초민족으로 규합해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다. 제3의 길은 없다.